

2019년 8월 9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의 중지에 대한 성명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 억압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전·성숙으로~

일본문화정책학회
회장 구마쿠라 스미코

일본문화정책학회는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학술조직입니다.

일본 헌법 제 21 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기본법 전문에는, 문화예술은 「사람들 마음을 연결하고, 상호 이해와 서로를 존중하는 토양을 제공, 다양성을 포용할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행하는 자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금지」는, 민주주의국가의 근간으로써, 헌법과 문화예술기본법과 같은 문화법제를 통해 보장되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과 집단의 자주적인 표현활동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을 막는 의도를 가진 개념입니다. 또한, 국가와 행정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관여를 막기 위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정치적인 개입으로 인해 사업의 방향성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작 현실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등에 관한 개입과 자기규제가 산견되고, 예술가나 그것을 지원하는 학예사등이 「자기검열」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실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방침과 견해에 일정 거리를 두면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야 말로, 사업 내용과 질에 관한 판단은 예술문화전문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9년 8월 3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 중 하나인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전시가 중지되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해 본 학회는 이하 3개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1) 불특정다수의 전화등에 의한 항의, 때로는 협박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가 방해되어 테러 미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과의 생각과 상반되는 표현이라 해도, 그것을 폭력으로 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며 결단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본학회는 단호하게 항의합니다. 이러한 협박·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과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2) 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부관료가 공공연히 전시 내용에 개입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표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표현 활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며, 신중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본래는 폭력을 막기위해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정부관료가 결과적으로는 폭력 측에 가담하는 형태로 현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주최자는 자기검열·자주규제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전시는 중지되는 상황에 물렸습니다. 중지 이유는 관리운영상의 지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향후 이러한 지장을 야기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담보로 한 채, 전시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문화사업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가 증대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일본문화정책학회는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향후 공적지원을 받는 예술제나 국공립미술관, 문화시설등의 현장, 나아가서는 언론계까지 위축되고,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입장에서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한층 더 제약을 받게 될 까 심히 우려됩니다.

일본문화정책학회는, 이러한 현황을 특정 예술제 문제로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물론 시민·예술가·예술문화전문직과도 연대하여 폭넓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공헌하겠습니다. 예술문화의 장은, 다종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다수과 의견에 상반될 지라도 민주주의에 이바지하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본 학회는 현 사태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관한 토론을 심화해 나갈 것이며, 문화정책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이라는 양면으로부터 더 나은 일본 민주주의의 발전·성숙에 기여할 것을 맹세합니다.

(번역 일본문화정책학회 이사 민 진경/ 회원 이 지영)